

# 김기현 ‘캠프개소’, 안철수 ‘출마선언’... 세몰이 본격화

## 달아오르는 與 당권 레이스

김기현 오늘 ‘이기는 캠프’ 개소식 장제원 등 친윤 인사들 대거 참석 안철수, 당원협의회 찾아 당심공략 선대위원장·총괄본부장 등 인선 나경원·유승민 당대회 최종 변수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한 김기현(왼쪽에서 여섯번째) 의원과 장제원(왼쪽에서 네번째) 의원, 배현진 (가운데)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송파구민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송파를 신년인사회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시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 선언과 출정식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이른바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좌우되는 만큼 주요 주자들의 견제도 치열해지고 있다.

원내에서 가장 먼저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김기현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이기는 캠프’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친윤(親尹석열)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권성동 의원은 8일 “김 의원 캠프 개소식에 참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캠프 개소식 전날인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정치모임

‘호밀밭의 사람들’ 발족식 및 대담회에 참석했다. 전당대회에서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출마 선언 당시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고 지역을 확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안철수의원도 9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출마 선언에 앞서 안 의원은 최근 여의도 극동 VIP 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고, 8일 오후 서울 은평구를 당원협의회를 찾아 당심공략에 나섰다.

같은 날 안 의원은 경선 캠프 선거대

책위원장·총괄본부장 인선도 발표했다. 캠프 선대위원장은 옛 친이(親李明박) 출신인 3선의 김영우 전 의원이다. 총괄본부장은 안 의원 최측근인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다.

이들은 본격적인 세몰이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 김 의원이 장제원 의원과 ‘김장연대’를 구축한 가운데 안 의원은 지난 7일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3월이면 김장 김치가 된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이 윤상현 의원과 구축한 ‘수도권 연대’에 대해 견제하는 김 의원을 겨냥

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마지막까지 당 대표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하는 중이다. 나 부위원장은 8일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한 대통령실 우려 표명에 “오해를 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달라”고 했다.

지난 6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가운데 나 부위원장이 전

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마음을 굳혀가는 중”이라고 밝힌 데 이은 입장이다.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공개 비판으로 거취에 치명상 입은 게 아니냐는 분석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 고심은 더욱 깊어진 모습이다.

이 밖에 비윤(非尹석열)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는 10~11일 대구에 방문, 보수층 당심 공략에 나선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가 책임당원 100%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윤심’ 영향을 고려해, 출마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권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탈북자 출신 지성호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지난 5일 청년 최고위원 출마표를 낸 데 이는 도전장이다.

한편 당권 주자에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 출마 선언도 이어지는 가운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논의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내일 檢 출석 이재명, 당 지도부와 동행

## 이 대표, 조용히 수사 준비 중 검찰출석 시 공개 발언 있을 듯

지난 2020년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로 정치생명을 이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 번 기나긴 법정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에 수원 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에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는 만큼, 결백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2016년 사이 두산건설로부터 프로축구구단 성남FC에 약 50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두산 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성남시가 용적률·건축 규모·연면적 등을 3배 가량 높이고 전체 부지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아 기업 측의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18년 6월 경찰에 제3차 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고, 3년 넘게 수사를 벌인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자동 송치된 사건은 분당경찰서의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을 넘겨 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이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 측은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아침에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조용히 (검찰 수사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출석 시 공개 발언 여부에 대해 “당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고 출석해서 조사 받는데, 그 과정에서 당 대표가 이야기 하지 않겠다. 상식적 수준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러 가서 그냥 들어 가진 않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당 지도부들도 10일 이 대표와 함께 성남지청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검찰과 이 대표 측도 혐의 입증과 방어를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 “부실 위험 대학, 재산처분 등 특례 부여”

##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지방대학-지역 선순환 발전 위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구축

국민의힘과 정부가 8일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 과제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 구축 ▲고등교육 규제 혁신 및 부실대학 구조개혁 ▲폐교·유휴 학교 부지에 문화·체육·복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 가운데 ‘지방대학 살리기’부터 집중할 것이라는 셈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발표했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협약에 따르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구축 차원에서 정부는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에 이양·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 체계를 올해 중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등교육 규제 혁신 및 부실대학 구조 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기로 했다.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에는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 특례를 부여하고, 학교법인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생이 어려워도 학교법인 해산 과정이 복잡해 추진하기 어려웠던 점을 정부가 규제 개선으로 풀어주는 셈이다. 이와 관련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올해 안에 만들 수 있도록 당정이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폐교했거나 학교 유휴 부지에 지역이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 민주 “권한에는 책임 따른다”... 이상민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상민 장관은 10·29 참사 국정특위 2차 청문회에서 직무유기를 결국 인정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10.29 참사 당시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하지만 행안부장관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이상민 장관

은 위기경보 발령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등 그에 따른 임무들을 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긴급구조와 현장책임을 모두 소방에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 장관이 ‘행안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인정한 순간, 더는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10·29 참사의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퇴는 거부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인가, 아니면 이상민 장관의 집착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인가. 아무 책임 없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인가”라고 꼬집으며 “이 장관의 법률 위반이 국정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그 책임마저 부정하는 파렴치한 장관을 언제까지 감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태홍 기자